



보도 일시	2022. 5. 19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5. 19.(목) 10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송지현 (sjh4711@korea.kr)

'22.1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

- '22.1/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비 +10.1% 증가하며 통계 발표 이후('06년) 최대 증가폭 기록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0% 증가
 - 고용시장 호조, 전반적인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'주요 시장소득(근로·사업)'이 4분기 연속 증가, 1차 추경 등으로 이전소득도 증가
 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06.2<+10.2%> (사업)86.2<+12.4%> (이전)78.0<+7.9%>
 -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했으나, 1분위의 사업소득은 감소(△7.0%)
 - 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0.1 **(1분위)+14.6** (2)+10.4 (3)+9.2 (4)+7.1 (5)+11.5
-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, 전년도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(+4.7%)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폭(+10.0%)이 더 커 흑자액 큰 폭 상승(+21.7%)
 - 적자가구 비율도 감소하였으나, 1분위내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(57.2%)
 - 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 - ※ 적자가구 :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- 1/4분기 5분위배율은 개선되었으나(6.20배, 전년 6.30배 대비 △0.10배p↓), 계절성·변동성 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
 - *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'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

◇ 1/4분기 가계동향 소득·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현재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

→ 민간 일자리 창출,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,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부담 증가 완화에도 총력대응

- 아울러,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안 통과에 속도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.5만원, 전년비 +10.1% 증가

○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+6.0% 증가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06.2<+10.2%> (사업)86.2<+12.4%> (이전)78.0<+7.9%>

○ (근로소득) 고용 증가¹와 임금 상승² 등 영향으로 증가

1」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1/4)△38.0 (2/4)61.8 (3/4)57.7 (4/4)66.0 **(‘22.1/4)100.1**

2」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(전년비, %): ('21.1/4)4.2 (2/4)4.0 (3/4)5.0 (4/4)5.2 **(‘22.1~2월)7.5**

○ (사업소득) 자영업자 수 증가¹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
업황 개선² 등 영향으로 증가

1」 자영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1/4)△10.6 (2/4)△0.8 (3/4)△0.5 (4/4)4.8 **(‘22.1/4)10.3**

2」 서비스업생산지수(전년비, %): ('21.1/4)2.3 (2/4)5.7 (3/4)3.9 (4/4)5.5 **(‘22.1/4)4.1**

↳ 거리두기: ('21.12.18)4인⁹시, ('22.1.17)6인⁹시, (2.19)6인¹⁰시, (3.5)6인¹¹시, (3.21~)8인¹¹시

○ (공적이전소득)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¹, 1차 추경 집행² 등으로 증가(+9.5%)

1」 국민연금수급액 인상, 기초연금 소득기준 완화금액 인상,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(1월~)

2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10조원), 손실보상(2.8조원),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(0.7조원) 등

분위별 소득

□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이 큰 폭 증가

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0.1 **(1분위)+14.6** (2)+10.4 (3)+9.2 (4)+7.1 (5)+11.5

○ (1분위) 사업소득은 감소(△7.0%)하였으나, 근로(+34.2%)·이전소득
(+12.7%) 증가로 총소득 큰 폭 개선(+14.6%)

- 임시직 취업자가 증가*하며 근로소득이 큰 폭 증가하고, 공적연금·
기초연금 확대 등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(+15.9%)

* 임시직(전년비, 만명): ('21.1/4)△22.5 (2/4)34.9 (3/4)33.5 (4/4)14.8 **(‘22.1/4)29.5**

○ (5분위) 근로소득(+10.0%), 사업소득(+22.5%)과 이전소득(+7.0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 개선(+11.5%)

- 임금 상승^{1」}, 상용직 취업자 증가^{2」}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,
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^{3」} 및 업황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

1」 상용직 임금상승률(전년비, %): ('21.1/4)4.2 (2/4)4.3 (3/4)5.1 (4/4)5.2 **(22.1~2월)8.0**

2」 상용직(전년비, 만명): ('21.1/4)10.9 (2/4)32.9 (3/4)40.0 (4/4)62.6 **(22.1/4)75.5**

3」 고용有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1/4)△13.6 (2/4)△7.2 (3/4)△6.0 (4/4)0.7 **(22.1/4)4.3**

-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정 집행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(+20.6%)

지출 · 가계수지

□ (처분가능소득) 총소득 증가로 모든 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비 증가(+10.0%)

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(조세, 연금지출, 사회보험료 등)

*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(전년비, %): (1분위)+16.4 (2)+9.6 (3)+8.0 (4)+7.3 (5)+11.7

□ (소비지출)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비 +4.7% 증가(실질 +0.8%)

-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식료품, 교통 등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 전환·감소폭 확대

* 지출 증감률(전년비, %, 명목/실질) : (식료품)+0.9/△3.1 (가사)△10.4/△13.8 (교통)+2.8/△6.0

□ (가계수지) 흑자액은 132.9만원으로 전년대비 +21.7% 증가하였고,
평균소비성향은 65.6%로 △3.3%p 하락

※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 / 처분가능소득)×100

- 소득 증가로 적자가구 비율은 23.5%로 전년대비 △1.1%p 하락

※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
*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(%): (1분위)57.2 (2)25.0 (3)16.7 (4)12.2 (5)6.5

소득분배

□ (5분위배율)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상회하며

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△0.10배p 하락(개선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√가구원수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1/4)6.89 ('21.1/4)6.30 **(22.1/4)6.20**

- ① '22.1/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비 +10.1% 증가하며 통계 발표 이후('06년) 최대 증가폭 기록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0% 증가
-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, 1분위 증가율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나, 1분위의 사업소득은 감소($\Delta 7.0\%$)
 - * 분위별 소득 증가율(%): (전체)+10.1 **(1분위)+14.6** (2)+10.4 (3)+9.2 (4)+7.1 (5)+11.5
 - 물가 오름폭 확대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+6.0% 증가
- ② 고용시장 호조, 전반적인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'주요 시장소득(근로·사업소득)'이 4분기 연속 증가, 1차 추경 등으로 이전소득도 증가
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06.2<+10.2%> (사업)86.2<+12.4%> (이전)78.0<+7.9%>
 - 취업자 증가(+100.1만명) 등으로 근로소득이 +10.2% 상승, 자영업자 증가(+10.3만명)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(+4.1%) 등으로 사업소득도 상승(+12.4%)
 -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1차 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지며 공적이전소득도 증가(+9.5%)
 - 공적이전소득의 분위별 소득 증가 기여도는 1분위에서 가장 높았음
 - *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(%p): **(1분위)7.6** (2) $\Delta 1.0$ (3)1.9 (4)0.2 (5)1.2
- ③ 소비지출도 물가 상승, 전년도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(4.7%)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폭(10.0%)이 더 커 흑자액 큰 폭 상승(+21.7%)
- 적자가구 비율도 감소하였으나 1분위내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(57.2%)
 - *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(%): **(1분위)57.2** (2)25.0 (3)16.7 (4)12.2 (5)6.5
- ④ '22.1/4분기 5분위배율은 개선되었으나, 계절성·변동성 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
-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3분기 연속 전년비 하락($\Delta 0.10$ 배p)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1/4)6.89 ('21.1/4)6.30 **(22.1/4)6.20**

- '22.1/4분기 가계동향 소득·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현재 우리경제가
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
-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여건에도 최근 소득·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
①민간 일자리 창출, ②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,
③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부담 증가 완화에도 총력대응
- ❶ 시장소득·분배 여건이 민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,
규제 혁파, 벤처·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
- ❷ 여전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,
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지원·안전망 강화에 집중
-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
및 수준을 확대하고,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,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
중층적 고용·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배가
- ❸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
2차 추경內 생활물가 안정 지원 방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,
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민생안정대책을 조속 마련할 계획
- 아울러, 1분위 사업소득 감소를 통해 나타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
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2차 추경안 통과에 속도
- *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23.0조원), 손실보상 제도개선(1.5조원), 방역소요 보강(3.5조원),
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(1.7조원) 등